3500억 달러 대미투자 관리법 속도… 행정통합법은 제자리

3월 임시국회 개막

한미투자전략공사 설립 등 합의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 듯
입장 정리 안된 국힘, 충남대전 반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태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주요 법안 논의를 이어간다. 3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행정통합특별법과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이다. 이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12일 처리가 무난해보이지만, 행정통합법은 난항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통합특별법은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법만 통과된 상태이며, 대구경북·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남아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역 내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는 분위기지만, 아직 국민의힘 당론이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전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통합특별법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특별법과 충남대전특별법 등 통합법 처리는 (여야 간) 이견이 재확인돼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내부 정리부터 해서 의견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구경북특별법 선제 처리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 정리가 안 된 건 두 지역이 똑같은데, 대구경북은 하고 대전충남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그 다음 쟁점은 대미투자특별법이다. 해당 법안은 한미 관세 MOU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재원 및 운용 등을 다룬다. 현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명칭으로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지난달 초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대미투자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헌법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에 야당이 반발하며 약 3주간 구체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미투자를 관리하는 '한미투자전략공사'를 설립하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합의를 이끌어내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대부분 다 정리됐다"며 "오는 9일 전체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소위를 통해 한미투자전략공사 신설에 합의했다면서 "(새로)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출자도 다른 기관에서 받지 않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투자공사(KIC)에 기금을 맡기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신설된 공사의 기금에서 (투자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책임성 확보에 더 좋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라며 "계속 주장하다가는 월요일에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대승적으로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였고, 사장과 이사에 대해서는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고 했다. 공사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경력자'라는 제한을 둔 것이다.

국회 동의 절차도 사전 보고 형태로 완화됐지만, 보고 주체는 공사가 아닌 정부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회) 동의는 너무 건건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고로 바꿨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고, 보고 주체도 공사로 돼 있는 걸 정부로 바꿨다.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기재부 장관이 발을 빼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위 활동 시한 내 법안 심사를 마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도 3월 임시국회 화두로 꼽힌다.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공소청장 명칭을 비롯해 보완수사권 논의 등으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 7개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두고 여야가 또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김보민 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이 대통령, 시장안정 100조 투입·유류 매입가 공개 검토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 자금 가동
중동 교민 안전 위해 우방국과 공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부처에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유가 안정,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했다.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환율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데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100조원 가운데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최대 37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0조원 등이 가동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증권시장 안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비정상이 발생할 때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옛날에는 주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기도 했는데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경제 체제를 제대로 바꾸고 정상 가격에 수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시차 없이' 유가가 급등한 데 대해 "객관적으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가격이 급등했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일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21.98원으로 전일 대비 44.50원 올라 1800원을 돌파했다.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를 감안해도 지나치게 빠르게 가격이 뛰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려는 태도"라며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바가지 요금' 문제에는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달라.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에 대한 가격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동 지역 교민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우방국과 공조하고 군용기, 전세기,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민주, 지선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공천

"성공적으로 도정 이끈 경험"

더불어민주당은 5일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공천했다. 민주당은 앞서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의원, 강원지사 후보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한 바 있다.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위원장을 단수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이해와 지역발전 DNA를 갖춘 사람이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 경남에서 민주당 깃발을 지켜온 김 후보는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며 "5극 3특 시대를 이끌 적임자로 김 후보가 매우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색인 파란색 점퍼를 김경수 후보에게 직접 입혀주며 축하했다. 정 대표는 "(단수공천) 1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2호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이어 경남지사 후보로 김 후보가 공천을 확정짓고 출전한다"며 "모두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필승 카드"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 발전 전략을 진두지휘하며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시했던 선각자이자 지도자"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당원과 국민이 제게 주시는 엄중한 명령"이라며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 발표에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